

“단호 대응” vs “구조 미흡” 여야 국방위 충돌



서울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감 첫날 ‘北 피격’ 국방 협상결렬로 증인없이 시작 여 “다음주까지 채택 논의”

서해에서 실종된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여야의 국정감사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5일 국방부에 대한 국감에서 “실종자 구조 노력이 너무 미흡했다”며 “대통령이 보고받은 후 구조와 관련한 아무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실종자의 월북 의도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설사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국민 생명을 구해야 하지 않느냐. 한강 다리에 자살하려고 올라간 사람은 안 구하

나”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강대식 의원은 국방부의 국회 보고와 북한 통일전선부 명의 통지문의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파고들며 “북한이 대한민국을 조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군은 모든 정보자산을 동원해 관련 첩보를 적시에 수집하고 보고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우리 군이 단호한 어조로 대응하고 발표했기 때문에 북측에서 이른 시간 안에 사과 통지문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은 감청 내용 등 SI(Special Intelligence) 정보가 누출된 점을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앞으로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이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국방위 국감은 여야 협상 결렬로 일반 증인 없이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추미에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과 서해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증인을 1~2명이라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19일로 예정된 백령도 현장 점검을 연평도로 변경하자는 요구도 하고 있다. 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은 이와 관련,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 다음 주중까지 야당 간사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간사에서 사퇴한 한기호 의원은 이날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서울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행위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면서 “진상

규명이 돼야 하며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사건이 “적대행위에 해당하느냐는 국민의힘 운주경 의원 질의에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하며 “포괄적으로 크게 보면 적대행위로 볼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서 장관은 “북한에서 나온 통지문과 저희가 알고 있는 첩보 간 차이점을 분석하고 있다”며 “정보기관뿐만이 아니고 다른 조사기관까지 더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군계통의 상부 지시”에 의해 총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는 군 발표와 달리 북한이 (단속)정장 결실 하에 사격을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현재까지 (군이 분석한) 정황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재정준칙 굳이 왜 지금?” 여야 모두 불만

여 “경제 불확실해 부적절”...야 “실효성 없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경제·재정정책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재정준칙의 문제점에 집중 포화를 쏟아부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을 더 풀어야 할 시점에 재정준칙 도입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켰다며 불만을 보였으나 국민의힘은 실효성 없는 “땀방 준칙”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재정준칙의 필요성이나 취지를 부정하지 않지만 경

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지금 도입해야 하느냐”며 “성장률을 정상적으로 끌어올리고 재정이 안정된 상황에서 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도 “재정준칙 도입이 결과적으로 기재부 의도와 달리 상당한 오해와 불필요한 정치 논쟁으로 치달게 된 것이 현실”이라며 “이 시기에 꼭 기재부 스스로 논쟁을 촉발할 필요가 있었나”라고 비난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만들지 말았어야 하는 재정준칙이다. 주물럭거리다가 해괴망측한 괴물을 만들었다”며 “그간 금과옥조처럼 여겨진 관리재정수지를 팽개치고 갑자기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삼았고 국가채무비율 기준도 이상하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한마디로 ‘우리는 원 없이 쓰고 간다, 차기 정부 부담은 모르겠다’는 의미의 재정준칙이다. 요즘 말로 ‘아물랑’이다”며 “기상천외한 산식에 한도도 느슨하고 법률 아닌 시행령에서 숫자를 정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방향을 달랐지만 여야가 일제히 비판을 쏟아내는 동안 흥 부총리는 종종 언성을 높여가며 반박에 나섰다. ‘굳이 지금 도입해야 하느냐’는 여당 의원들의 비판에 흥 부총리는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증가 속도가 과거와 비교하면 완만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다. 지금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효성 없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흥 부총리는 “이 산식과 내용을 보고 준칙의 엄격성이 느슨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다. 결코 그렇지 않다”며 “중기재정계획상 국가채무비율이 4년 뒤 50%대 후반으로 가는 것으로 예측돼 60%라는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고 맞섰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민형배 “총리실 산하 위원회 18곳 비수도권 출신 전무”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 63곳 중 18곳이 비수도권 출신 위촉위원 한 명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 의원이 국무조정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수도권 출신 위촉위원을 단 한 명도 위촉하지 않은 위원회는 18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63개 위원회 중 28.57%에 달한 수치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지원 위원회’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



‘포항 지진 피해 구제 심의위원회’ 역시 위촉위원 중 비수도권 출신이 단 한명도 없어 지역민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 의원은 “지역과 성별 편중 문제를 해결해서 의견수렴의 객관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제라도 제대로 정비해서 현안에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권일 기자 cki@

조오섭 “전국 행복임대, 9.2% 6개월 넘게 공실”

LH가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에 공급하고 있는 일부 행복임대주택이 교육, 교통 등 정주여건이 열악하고 생활권과 동떨어진 지역에 건립되고 있어 입주대상자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북구갑) 국회의원은 7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말 기준 전국 행복임대주택 107개 단지 5만6769세대 중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세대는 5238세대(9.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



했다. 조 의원은 “행복임대주택은 신혼부부,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에 주거 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주거공급을 목표로 하는 만큼 주거의 질적인 측면을 더 고려해야 한다”며 “행복임대주택은 ‘싼 게 비지떡’, ‘낙인효과’ 등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생활기반 인프라가 확충된 도심권에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재 “10년 뒤엔 30년 이상 노후 교량 42.2%”

10년이 지나면 30년 이상 노후 교량이 전체 교량의 절반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의 노후 교량에 대한 대비책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희재의원(여수)은 7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전체 노후 교량은 총 4934개소로 13.7%에 불과하나, 10년 뒤인 2030년에는 노후 교량이 1만5147개로 42.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2021년부터 10년 동안 예상되는 연평균 증가량은 957개소였는데, 2025년부



터 노후 교량의 개소가 연간 1,000개 이상씩 늘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노후 시설물 예산은 18년도에 4640억원으로 전년 대비 485억원이 감액됐다. 이후 19년과 20년도에 각각 471억원과 763억원이 증액되었지만, 이 같은 증액량으로는 급증할 노후 시설물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승남 “정부양곡저장고 노후화로 쌀 품질 저하”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7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매년 수천억원이 투입되는 공공비축미 관리가 오랫동안 수의계약 형태의 정부양곡도정공장과 저장창고 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니, 품질이 떨어진 쌀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부공공비축미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비축미의 비축규모는 FAO(유엔식량농업기구) 권고기준에 따라 약 80만톤으로 유지시키고 있으며, 매년 평균



35만톤 내외를 신규 비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양곡 저장창고 중 30년 이상 노후화된 창고가 3,234개소로 69%를 차지하고 있고, 품질 유지를 위한 저온창고는 전체의 12%에 불과해, 곰팡이, 썩벌레, 쥐똥 등 품질을 떨어뜨리는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역사 010-6211-4585”

매매 물건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물건

- 공장**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토지 : 5388.4㎡(1630평) 건물 : 622.57㎡(188.3평) 감정가 : 5,106,825,160원 최저가 : 3,574,778,000원(70%) 유찰 1회
- 공장**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토지 : 18875.5㎡(5709.8평) 건물 : 6386.82㎡(1932평) 감정가 : 5,994,297,460원 최저가 : 4,196,008,000원(70%) 유찰 1회
- 공장**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토지 : 10323.1㎡(3122.7평) 건물 : 1155.94㎡(349.7평) 감정가 : 1,892,743,280원 최저가 : 1,324,920,000원(70%) 유찰 1회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